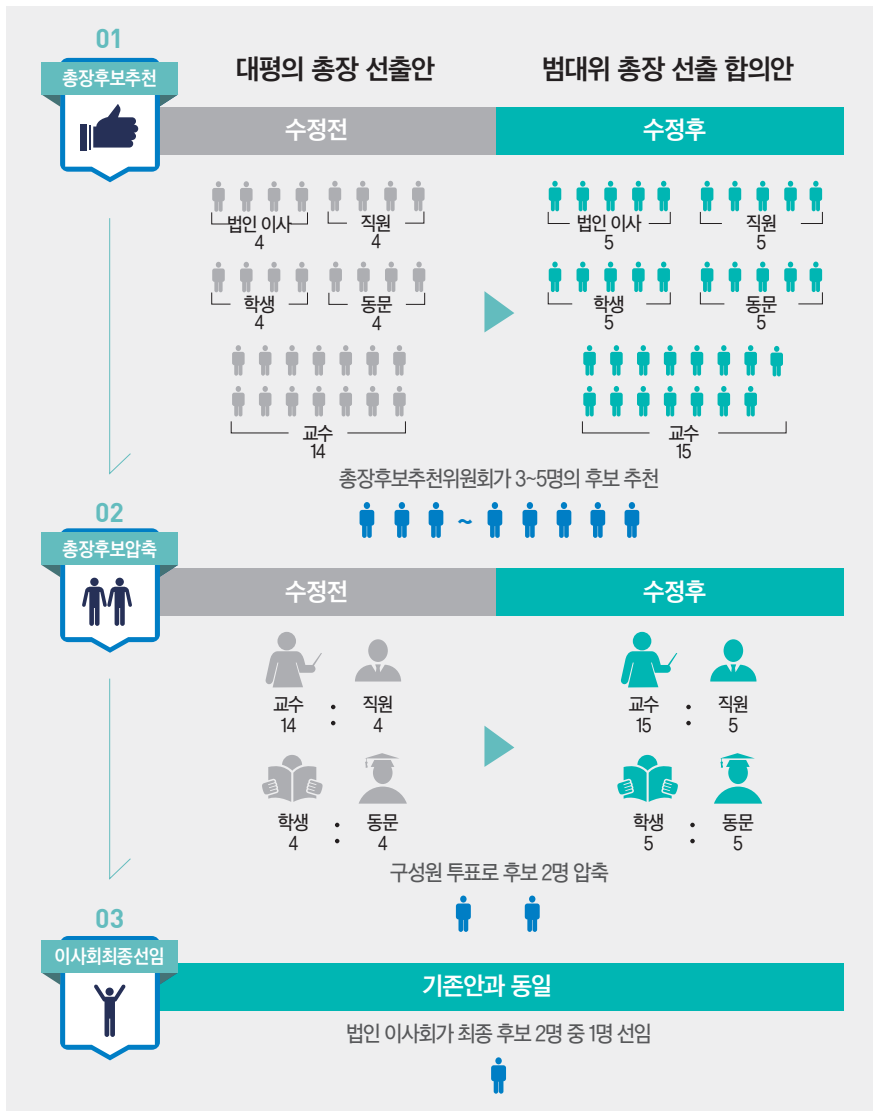
범대위 합의안, 3단계 구조 유지 구성원 투표에 교수 비중 축소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가 기존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은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이 가졌던 '총장 선출 3단계 구조'와 '구성원 투표' 시행 2가지 핵심 골자를 그대로 유지했다.

총장 선출 3단계 구조는 '총장후보추천→총장후보압축→법인이사회최종선임' 순으로 진행되고,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과 동일하게 구성원 투표가 시행된다. '총장후보추천' 단계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맡고 있어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과 동일하다.

이번 범대위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총추위와 구성원 투표에서 전체 구성원 중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총추위와 구성원 투표에서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와 50%이다. 이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타 대학과 비교해 낮은 수치이다.

'총장후보추천' 단계와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 각 구성원 단체별 의결권 비중이 다소 조정됐다. 범대위 합의안은 교수·학생·직원·동문 구성원 단체별 의석수를 각각 한 자리씩 늘렸다.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은 교수 대표 14명, 학생·직원·동문·법인 대표 각각 4명 모두 30명으로 총추위를 구성하고, 교수:학생:직원:동문:법인은 14:4:4:4:4 비율로 의결권을 갖는다.

반면,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은 총추위를 꾸리는 5개 구성원 단체별 의석수가 각각 하나씩 늘었다. 이에 총추위 총 의석수는 기존 30석에서 5석 증가한 35석으로 수정됐다. 의결권 비율도 교수:학생:직원:동문:법인이 15:5:5:5:5로 조정됐다.

총추위 의결권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 시행되는 구성원 투표의 반영 비율도 교수:학생:직원:동문이 기존 14:4:4:4에서 15:5:5:5로 수정됐다.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학생·직원·동문·법인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대학교 총추위는 모두 30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교수가 차지하는 의석수는 15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우리학교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의 총추위 교수 비중이 43%인 것과 비교해 7%p가량 높은 수치다.

총추위뿐만 아니라 구성원 투표에서도 전체 구성원 대비 교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구성원 직선제가 도입된 이화여대는 투표 반영 비율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구성원의 77.5%에 육박한다. 우리학교 범대위가 구성원 투표에서 교수의 비중을 50%로 제안한 것에 비교해 27%p가량 높다.

총장 선출 마지막 단계인 '법인이사회최종선임' 과정은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구성원 투표 결과 최다 득표 2인 중 한 명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가 우리학교 총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법인이 학생·직원·동문과 동률로 총추위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총장 최종 선임 권한을 가진 점을 미뤄보면 범대위 합의안은 법인의 권한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수의회는 "총추위를 교수,직원,동문,이사회 등 우리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후보가 최종 추천 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최종 후보군을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총장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총추위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2인의 후보에서 총장 선출권을 법인 이사회에서 부여해 이사회의 권위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사학 재단의 고유 권한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간 졸업이수학점 축소

〈선시행 후개정〉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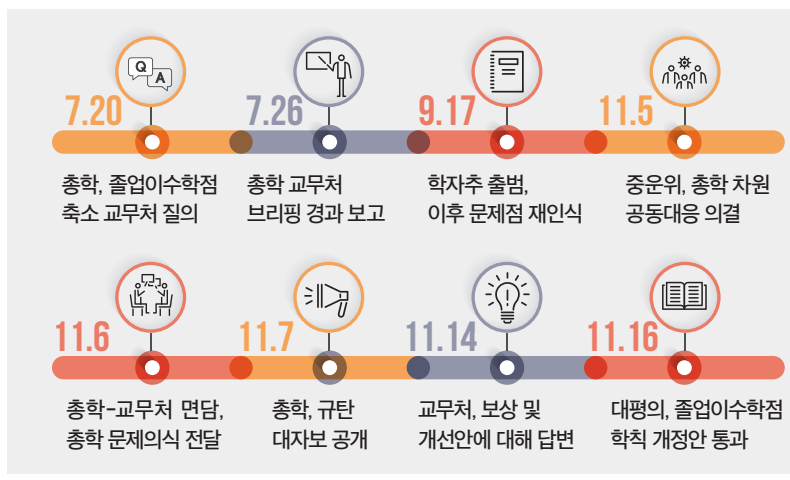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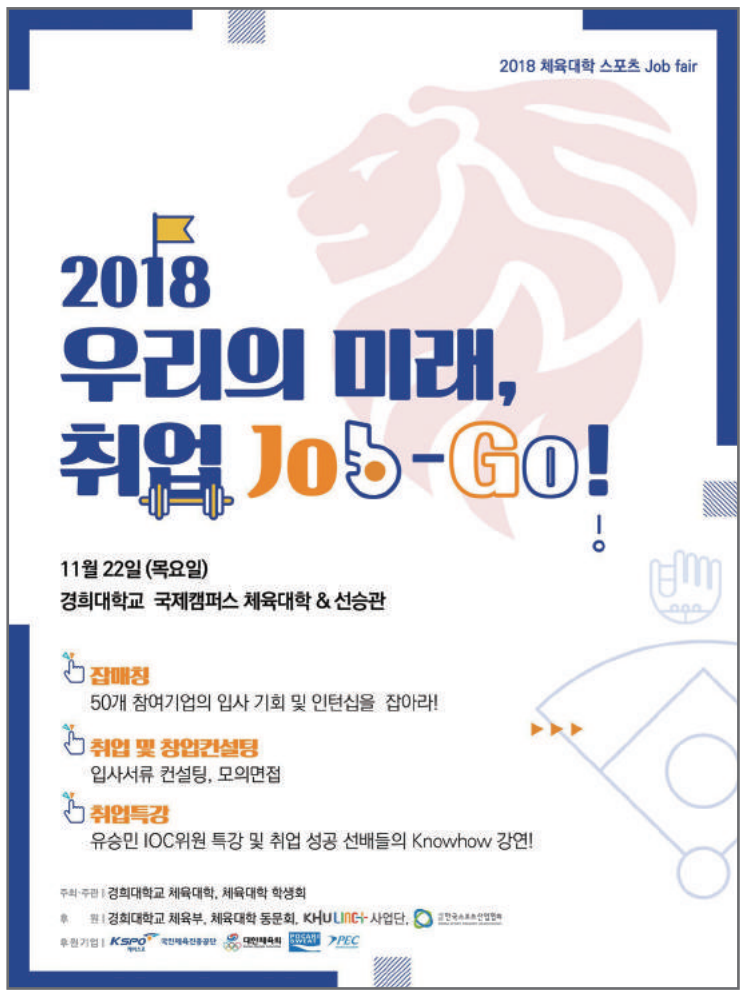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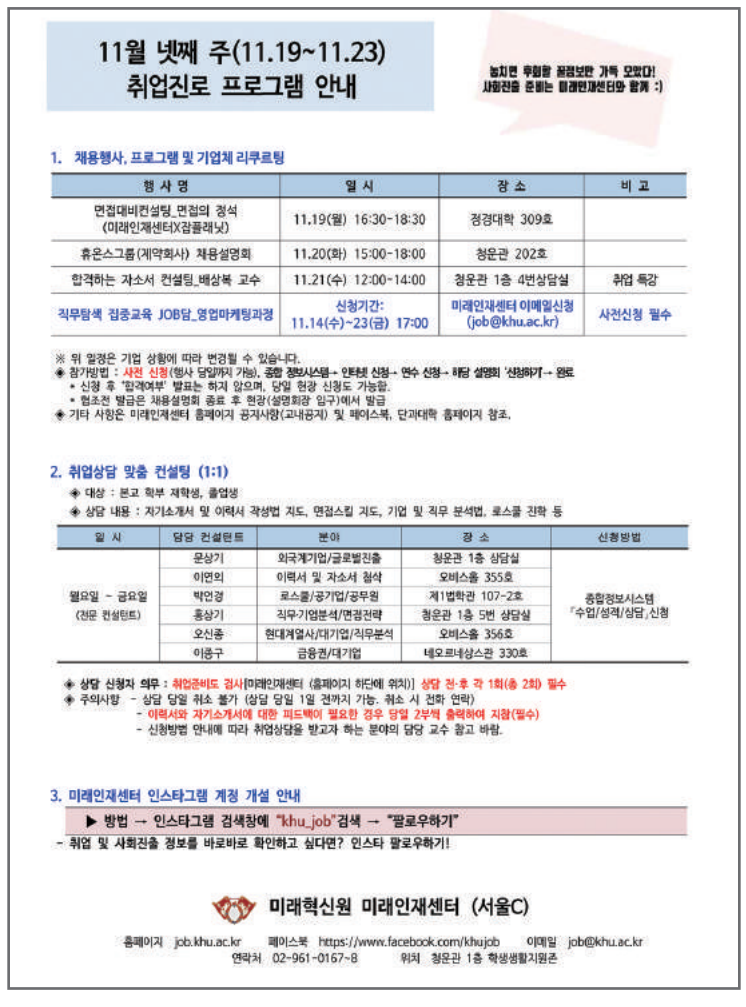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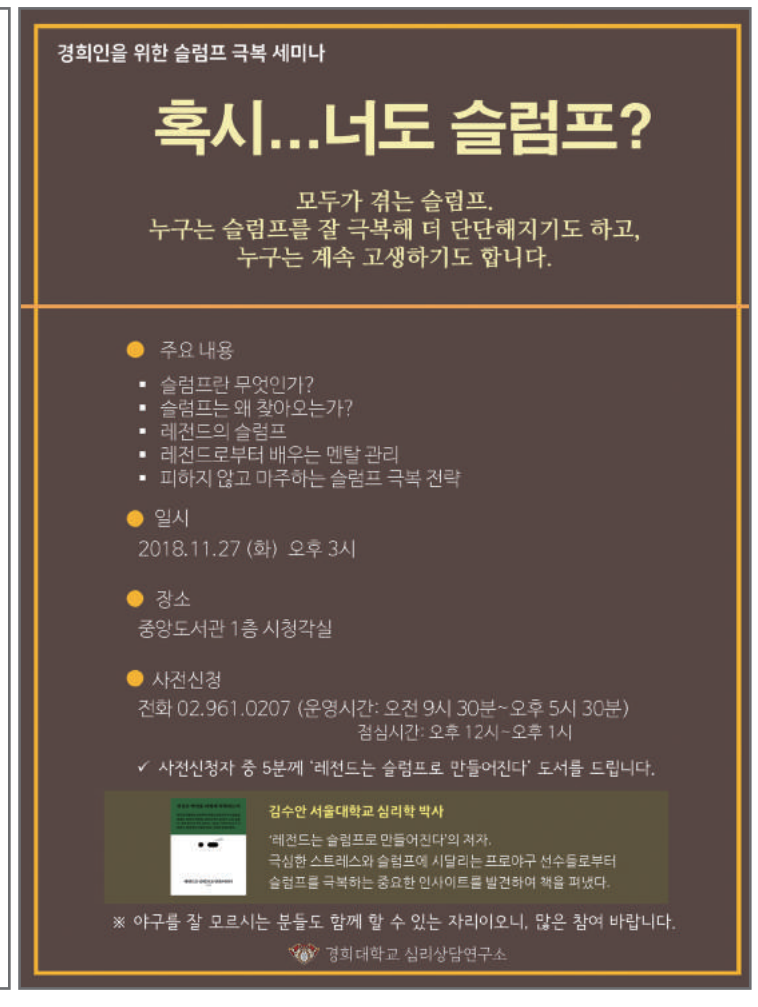
【서울】 경영대, 무용대, 음대, 정경대, 호관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을 기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한 것에 뒤늦게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당 단과대 신입생의 수강가능학점은 지난학기 18학점에서 이번학기 15학점으로 변경 적용됐다. 총학생회(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는 지난 7일 다섯 개 단과대 신입생의 졸업이수학점을 변경한 학교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내고 연서명을 진행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는 "지난해부터 부총장연석회의, 학장-부서장회의, 학장회의 등을 통해 단과대학별 졸업이수학점 축소가 논의돼 왔다"며 "과목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강의 질 향상, 학업부담 감소와 자기주도적 사회진출 설계 기회 확대가 개정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다섯 개 단과대가 졸업이수학점 축소 의사를 밝혔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학생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학기 희망과목담기 기간에 이르러서였다. 다섯 개 단과대 18학번 학생들의 수강가능학점이 15학점으로 축소된 사실을 인지한 총학은 7월 20일 교무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당시 교무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해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9월 출범한 총학 산하 학자추가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다시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11월 5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 차원의 공동대응안을 의결했다. 다음날인 6일 총학은 교무처와 면담 자리에서 이에 관해 문제제기 했고 교무처는 어느 정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7일, 총학은 문제제기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학내 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총학은 대자보를 통해 이번 졸업이수학점 축소 결정에 "학습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록금의 실질적 인상, 소통의 부재, 다전공 등 학사제도의 모순 발생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항의가 제기되었음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이 개별 단과대의 교육과정시행세칙(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나 상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 제55조와 상충하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졸업학점에 관한 규정인 학칙 제55조는 졸업이수학점을 13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학과, 미술대학, 간호학과(야간),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만 예외적으로 120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총학은 학교가 학칙이 아닌 단과대의 내규 개정을 통해 졸업이수학점 축소를 시행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대평의)와 학생 대표자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대자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부당한 수강가능학점 제한 폐지, 향후 교육과정 변경에 있어서의 학생 참여 제도화를 요구하며 끝을 맺었다.

이후 11월 14일 교무처는 6일 면담에 대한 답변서를 총학에 보냈다. 답변을 통해 교무처는 해당 단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시적 수강가능학점 상향 조정이나 계절학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번 학기에 듣지 못한 3학점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대평의에서는 학생의견을 수렴한 후속조치 마련을 전제로 졸업이수학점 기준을 120학점 이상으로 하향하는 학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